

선관위 현장조사·토론회… 국민의힘 “해체 수준 쇄신” 압박

국조특위위원장 “민주주의 배임 행위”
국힘 “野 추천 검사 통한 진상 규명”
수사 대상·특검 추천 주체에 여야 이견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훼손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두고 정치권이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관련 토론회에서 국정조사를 넘어 야당 추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해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현장 조사에서 “송파구 선관위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계산 실수가 아니라 참정권을 박탈한 민주주의 배임 행위를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중량구 나 서대문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인쇄 비율을 상향했는데 유독 송파구만 50%를 그대로 유지했다”며 “왜 특히 사전 투표율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훼손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정치권이 해체 수준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일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현장보고회’에서 김남훈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직무대리의 브리핑을 듣고 있는 모습. /뉴스시

이 낮은 송파구에서 (인쇄 비율을) 그대로 유지했는가”라고 물었다. 서 의원은 “송파구 선관위를 비롯한 중앙선관위가 소극적”이라며 “선거 업무용 사무실도 우리가 오는 걸 알면서도 계약 연장이 불가해서 철거했다는 것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다. 필요하다면 며칠 만이라도 연장해

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고서에 따르면 잠실 4동 7투표소는 오전 11시34분부터 투표용지 부족이 예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전 1시간 동안 약 340매가 소진됐다고 한다면, (당시) 400매 정도

남은 상황에서 아무리 길게 봐도 한 시간이면 투표용지가 소진된다”며 “투표 감독관이 남아 있는 투표용지를 분명히 보고 있었을 텐데 이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김태규·나경원·윤용근 의원 주도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돼 선관위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주체 등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하고 있지만, 반드시 야당 추천 인사가 특검에 임명돼 실태를 파악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까지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검 수사 발표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에 따른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

겠다”고 약속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가 무능·부패 조직이 된 첫 번째 이유는 헌법을 오독(誤讀)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개헌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제대로 읽으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부문을 해결하는 것부터 선관위를 다시 만드는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김기현 의원은 선관위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파산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조직을 어떻게 뜯어고치려는 문제인데 그 첫 번째는 위철한 상임위원(중앙선거위원장 직무대행)을 당장 쫓아내는 것”이라며 “수고급이 버티고 있는데 무슨 개혁이 되겠냐”며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당무 감사위원장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metroseoul.co.kr



metro

김민석·정청래, 지역 돌며 당심 잡기 ‘총력’

김민석, 충청서 李 정부 업적 소개
정청래, 호남 지역 찾아 민심 호소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가 유력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2일 순회경선의 시작과 끝을 맺는 충청을 찾아 당심을 공략하고, SK하이닉스 청주 캠퍼스를 방문하는 등 광복 행보를 보였다. 당 대표 ‘연임론’을 펼치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도 ‘친명(친이재명)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당권 레이스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김민석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 소재 육거리시장을 방문해 바닥 민심을 들여다보고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지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후엔 SK하이닉스 청주 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등 ‘경제 전문가’의 면모를 보였다.

전날(1일) 이임식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김 전 총리는 유튜브 방송 오마이TV에 출연해 “(정 전 대표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굳이 (대표직을) 두 번 할 필요나 필연성은 지금 발견하기 어렵다”며 정

전 대표를 견제했는데, 다음날에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시민·소상공인·지역업체와 스킨십을 늘리고 수출 주요 품목인 반도체 공장도 방문하며 ‘차별화’를 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총리는 육거리시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세계적인 격변기에 대한민국 명운을 가늠할 역사적, 그야말로 국가적 승부수”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호남 한 지역에 집중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지만 호남, 충청, 영남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수도권으로 편중돼 있던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바꾸는 대전환의 승부수가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시장 상인을 만난 소감을 두근 “전통시장을 찾을 때 최근 증시가 과거에 비해 호전됐거나 전반적인 첨단 경제 부문의 산업이 좋아지는 상황에서도 물가,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에 그들이 지면 안 된다는 것을 늘 생각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당에 돌아와서도 첨단 산업을 챙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민, 바다

의 민생 경제를 같이 챙기겠다는 노력을 같이 하겠다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날(1일)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화동해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을 지켜봐 왔지만, 친명계를 향하신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 내부에서 조롱과 혐오 멸칭이 난무하며 갈등을 키우는 일부 세력에게 어찌 두 분의 만남과 메시지가 큰 울림과 정문일침(淸—針—따끔한 충고)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가 언급한 ‘일부 세력’은 자신의 연임을 비판하는 친명계를 일컫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또한 SNS에 광주 5·18민중추진회 당시 피해자 유가족 및 여성 피해자의 씬터인 ‘오월어머니집’ 방문 소식을 알리며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정 전 대표는 “오월어머니집 한도 풀어드리고 5월 영령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5·18 헌법전문수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힘, 상임위 참여 거부… 대야투쟁 강화

“법사위원장 양보 못 해”

국민의힘이 2일 국회의원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배분된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 상임위원회 구성 수용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인 결과, 이에 협조하지 않고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한 대야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2시간에 걸쳐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결론은 이 상태대로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강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가져갔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법사위를 그토록 고집했다”며 “왜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원장에 임명했다. 공소취소특검법을 더 신속하게 통과시켜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원 구성을 위해 17차례 원내 지

도부 등이 만나 협상을 이어갔으나, 법안 통과와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 직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관례상 국회의장을 원내 1당,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아 ‘견제와 균형’을 이뤘던 만큼,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됐고 지난 6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국회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국민의힘 몫의 상임위원들의 사임계를 제출했다.

/박태홍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확보 전략 정책·법령 정비·예산 배정 최우선 순위 미래 성장동력 확보·양극화 해소도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최근에 발표하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균형과 격차 완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세계는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직면해 있다”며 “반 발짝만 늦어도 영원히 뒤처지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감한 전략, 또 속도감 있는 실천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건 4차 산업혁명의 승자가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되 돌아보면 역대 정부들도 시대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큰 도약의 문을 열어왔다. 예를 들면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입 국에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미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령의 정비, 또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

행의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추가로 이어질 투자 계획 수립과 투자계획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된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함께, 사회의 불균형과 격차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자형 양극화를 방지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국민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며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려 있다는 자제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에 나서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기본적인 생활안정망 강화를 토대로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 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며 “특히 최근에 예상되고 있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 기자 syj@